

학교 경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08. 7. 3(목), 13:00~18:00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협의회

후원 기획재정부,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주관 **KDI** 경제정보센터



진행순서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 이종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축사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환영사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4:00~15:10 제1주제: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사회 : 김세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발표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15:10~15:30 휴 식

15:30~16:40 제2주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 :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발표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토론 : 김진영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16:40~16:50 휴 식

16:50~18:00 제3주제: 대학 '경제학 입문'교육의 문제와 과제

사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발표 :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토론 :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목 차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박명호] 1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홍택] 31

대학 ‘경제학 입문’ 교육의 문제와 과제

[손정식] 77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 사회 : 김세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발표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박명호(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 I . 문제의 제기
- II . 경제교육의 내용과 목표
- III . 경제교육, 과연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
- IV . 경제교육 수요, 어떻게 늘릴 수 있나?

“First is the surge of popular demonstrations against so-called globalization, which, in a sense, can be interpreted as really against capitalism. ... Many of the young people—and I think they are mostly young, although I saw some demonstrators out here about a month ago and I wasn’t entirely persuaded—most of the young people involved take part, I think, because they really have the best of humanitarian motives and I think they really do mean very well. But very often, at least according to my understanding and I think the understanding of most economists, what they are advocating i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they think they are trying to achieve. What they are saying they want to do and what effect it will have is exactly opposite. ... But sometimes it’s self-interest and OK; but when, in fact, well-meaning people are advocating things that will achieve the opposite of what they intend, I get a little bit more concerned (Anne O. Krueger, first deputy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2).

1. 문제의 제기(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왜 경제교육이 필요한가?)

□ 경제교육의 필요성/중요성

- 청소년의 낮은 경제이해도 및 왜곡된 경제관
 - 한국적 특수성: 입시 구조에 의한 학교 경제교육 왜곡
 - 한국 청소년층의 낮은 경제 이해도
 - 청소년의 반 시장 성향에 대한 Krueger 교수 언급
- 불충분한 학교 경제교육
 - 교사 공급 체계 미흡: 사회과 교사 공급 체계 개선 필요성(경제 전공 만들기)
 - 독립 과목으로서의 경제과목 위상 만들기
 - 지리과목과 비교 시 경제과목 중요성이 얼마나 낮은지
 - 입시 위주 교육 및 (학생들의) 경제 과목 선택권 결여

□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증대하는 경제교육 수요

- 고령화 사회: 연금생활자의 증가
 - 고령화 사회로 은퇴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연금 역할 중요시 되면서 연금에 대한 정보 확대와 인식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특히 대다수 국가에서 공적 연금 수준이 줄어들며 연금도 확정 급여 형에서 확정 기여 형으로 전환되면서 연금 제도의 변화 및 개인의 투자 결정에 필요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 경우 확정 기여 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가량이지만 향후 전 세계 추세와 같이 확정 기여 형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금융시장의 변화
 - 기술진보와 더불어 도소매 금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 너무 많은 금융상품과 금융정보로 금융시장의 복잡화

- 소비자가 금융시장에서 보다 많이 참여
 - 개인들의 펀드 상품 구매 및 주식 시장 참여가 증가 추세
- 잘못된 금융 의사 결정의 결과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개인 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할 수준
 - 서브프라임 시장 문제 역시 잘못된 금융 의사 결정의 소산물
- 금융이해도 수준이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너무 낮음.
 - OECD 국가 대상 서베이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도가 낮은 악순환
- 고용 및 연금 체제의 변화
 - 안정적이고 장기 고용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금융 수요도 변모
 - 연금 제도도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 예상

□ 해외 사례의 시사점

- 미흡한 경제교육 공급 체계 확대
 - 외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육 강화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ECD 및 EU 등도 회원국 경제성장 위해 경제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교육 강화를 권고

II. 경제교육의 내용과 목표(우리의 경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 경제학과 경제교육

-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란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과 교환, 분배와 소비 등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¹⁾을 지칭함.
 - 경제학의 목적은 경제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 경제학의 방법은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가설 설정과 검증의 과학적 절차에 기초하여 특정한 경제현상, 즉 사실(what is)을 객관적, 논리적,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여 복잡한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개념과 일반화를 통한 이론을 형성
- 한편, 경제교육은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과의 목표인 시민성 육성을 추구함²⁾.
 - “경제적 시민성”은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참여를 통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함.
 - 경제학은 수리적 모델에 의존하며 논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을 개발하고 연습시키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Michael, 1981).
 - 경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학적 지식, 개념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참여 능력을 키우는 것임
- Buckles(1991)에 따르면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당화는 그것이 논리적인 훈련이고, 주의 깊은 사고라고 지적
 - 경제학은 이성적 방법으로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하는 학생들의 능력

1)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2) 참고로 최병모 외(2004)는 경제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유형 1	유형 2	유형 3
목표	경제학적 지식, 경제적이해력(economic literacy)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력	경제적 공민성과 경제사회화
내용	경제학적 사실과 개념, 일반화와 법칙	개인, 사회적인 경제문제 중심	경제윤리 및 시민의 역할, 경제 제도와 조직
주요 방법	추론적 사고 및 지식의 구조화	사회과학 탐구와 가치 탐구	교화 및 전달

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경제의 이해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개인들에게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 경제교육 과정과 방법은 도구로서 경제학적 지식의 습득과 사고방식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개인 혹은 사회에 관한 경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제학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제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경제개념의 사용과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의 사용으로서 제시되어야 함.
- 즉,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적 시민성 육성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모 학문인 경제학으로부터 선택·추출해서 재구성
- 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제 생활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고자 하기 때문에 시민성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만 선택·추출하여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
- 노벨상 수상자인 토빈(J. Tobin)
 -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생동안 밥벌이를 하는 사람, 소비자, 그리고 시민과 유권자로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올바른 정보뿐만 아니라 그릇된 정보를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당면 과제

□ 현행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2월 개정 고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 과정은 국가가 주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편재되어 있음.
 - －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경제교육과정이 적용 중임.
 - － 2007년 2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임.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과의 4~5학년을 중심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
 - － 3학년에서는 주로 시장과 생산, 유통에 관한 내용들을 자신의 고장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 － 4학년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시장, 소비, 가정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배우고, 3학년에서 배운 시장, 생산, 유통의 내용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 5학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생산, 경제성장과 변동에 관련된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 － 6학년에서는 국제 경제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다루이는데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7학년부터 10학년 사이에 적용되는 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은 주로 9학년, 10학년에서 다루이는데 9학년과 10학년에 개설된 경제교육과정은 내용상 연계의 정도의 큰데 상대적으로 9학년이 미시영역을 다룬다면, 10학년에서 거시와 국제 경제개념 및 주제를 취급하고 있음.
 - －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에서 9학년 사이에서는 집중적으로 9학년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그리고 국민경제의 이해로 나누어 중학교의 경제교육 전체가 망라되고 있음.

-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일정부분 경제교육의 내용을 분담하였던 10학년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다만,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통합적인 주제 아래서 이들 현상을 주요 학습 주제로 삼고 있음.
- 10학년 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의 삭제는 11학년 진급 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과목인 ‘경제’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의 삭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임.

□ 낮은 경제교육 비중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7-10학년 기간 중에 배우게 되는데, 총 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사회과 총 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7%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1~12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은 사회과목 전체의 9.7%에 불과한 실정임(전홍택·김진영(2006)).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사회과목 선택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 선택은 총 9개의 사회과목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에 이어 4위를 차지
 -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도 경제과목은 총 11개 과목(윤리 및 국사 추가)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은 청소년들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음.
-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경제 과목을 선택할 유인이 매우 낮다는 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학생들이 외우기 편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경제 과목의 기피현상은 심화되어짐.

□ 부실한 교사 공급체계

- 중, 고교 경제교육과 관련되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는 경제관련 전문교사의 부족임.
 - 사회과목 교사중 경제학을 전공한 수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보충교육 장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사회과 교사 대부분이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양산되고 있는데 향후 경제과 전공 학생의 교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이런 교육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NCEE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제공, 워크숍 개최, 경제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애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 주고 있음.

III. 경제교육, 과연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

1. 경제교육, 누가 담당하나?

□ 학교 교육은 일생동안의 경제생활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기초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의식 함양에 중점

- 학교 밖 교육은 경제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이슈에 대처하거나 생애 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습득
 -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문제 발생 이후 학교 밖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경제교육의 Spectrum중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할수록 공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공급할 필요가 증대

○ 경제교육,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금융교육 역시 학교 경제교육과의 연계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학교 경제교육과 학교 밖 경제교육의 구분

- 학교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서 공급되어지는 반면, 학교 밖 교육은 시장시스템에 의해 충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비교 >

	학교 교육	학교 밖 교육
교육대상	· 청소년	· 일반인, 직장인, 은퇴자
교육내용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 (기초지식, 경제의식)	· 시장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 (심화지식, 금융설계)
교육시스템	· 공교육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	· 시장시스템에 의해 유상으로 교육수요를 충족

자료: 재정경제부(2007)

- 학교 밖 경제교육은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경제교육과 기관 홍보가 중첩되어 경제교육의 왜곡 가능성이 있음.
- 학교 밖 경제교육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
 - 수도권 위주의 경제교육 운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교육 격차 (Econ-Edu Divide)가 확대
 - 민간 기관들의 100여개 프로그램 중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3개 정도에 불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 협조 및 지자체의 경제교육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2. 경제교육 강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 해외 사례

- 미흡한 (공공재로서의) 경제교육 공급 체계 확대
 - 외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육 강화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ECD 및 EU 등도 경제교육 필요성 인식
- OECD 경제교육 중요성 인식하고 2003년부터 Financial Education Project 실시
 - 1단계: 금융 교육 위한 전문가 발굴 및 중요한 이슈 관련 질문지 작성 및 조사
 - 개인의 금융이해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전략 개발
 - 2단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도 관련 심층 분석하여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

- 연금 관련 금융 교육 중요성 부각
 - 개인: 은퇴 후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용주: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병가로 인한 노동 손실 예방
 - 정부: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 저축률 상승, 조사비용 감축 등
- 또한 많은 국가에서 공적연금 수준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연금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연금제도의 변화 및 개인의 투자결정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은퇴 후 소득 중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OECD가 발표한 회원국 대상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19개국이 연금 및 퇴직에 대비한 저축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역시 금융교육 강화 위한 공동체 및 회원국 차원의 지원 필요성 강조
 - 금융교육 강화가 EU 기관 및 시장 참여자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EU도 최근 27개 회원국의 금융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교육 강화 방안 마련
 - EU 회원국 간 금융 이해도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육 프로그램 차이도 많음.
 - 개인 차원에서의 필요성 증대
 - 근로생활의 불안정성 증대, 취약해진 사회보장 제도, 개인 부담 증대 등
 - 수명 증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경제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대
 - 금융상품의 복잡화
 -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 금융 상품의 다양성 증대 + 정보 홍수
 - 금융교육 강화가 EU 기관 및 시장 참여자를 위해 중요

○ 미국

- 1949년에 설립된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교사 경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개인 신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 사회과 교사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
- 전 학년에 걸쳐 표준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에 올바른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투자자 등으로 성장하도록 목표 설정
 - 특히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인센티브를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NCEE는 현재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예산 면에서는 2004년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530만 달러, 기부금 400여 만 달러, 교재판매대금 12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이 중 83%를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지출
- 민간조직인 NCEE가 미국 전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배경은 시장경제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는 확신 때문임.
 - 미국의 많은 기업이 NCEE를 지원하는 이유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음.
 - 고교 졸업생들의 경제과목 수강비율은 1982년 24%에서 2000년에는 50%대까지 크게 증가
-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잘 구축돼 있다는 미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Literacy)을 전국적으로 확산
- 2004년 의회를 통과한 No Child Left Behind(낙오아동방지법)에 의해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을 학교 경제교육에 포함시켜 추진
-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를 근거로 2004년에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20개 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이해력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교육을 지원

○ 일본

- 일본 경제교육센터(재단법인)은 출판, 영상, 경제교육 연구, 모델교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 (1968년 설립)
- 일본은 2005년 7월 「경제교육 추진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의 경우에는 민간역량의 부족으로 대표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

□ 금융교육의 강화 추세

- 학교 경제교육의 일환이었던 금융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교육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도입

- 특히 OECD의 금융이해도 프로젝트(Financial Literacy Project)와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정부 주도로 필요한 기관을 만들어 금융교육 강화

- 신설된 금융교육 기관은 최근 급성장

-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국 단위로 금융교육 실태 조사, 이해도 측정, 보고서 발표 등을 활발히 전개

- 특히 특정 연령대 및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실시

- 어린이, 청소년, 금융문제가 있는 계층 등

- OECD 연구는 금융교육 관련 원칙과 good practice를 제공

- 금융교육과 광고를 차단하고 초등학교 과정부터 금융교육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

- 금융교육을 저축, 부채, 보험, 연금 등을 평생에 걸쳐 활용하는 방법 설명

- 최근 금융위기 경각심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

- 금융교육의 중요성 부각

- 금융이해도 수준이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너무 낮음.

- OECD 국가 대상 서베이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도가 낮은 악순환

- “오늘 날 금융은 한 세대 전에 비해 대단히 복잡해졌다. 40년 전만해도 은행에서 구좌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런데 현재의 소비자는 광범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채도 적었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 별 필요도 없었지만 현 세대는 복리 개념부터 잘못된 금융 판단의 결과가 주는 의미까지 잘 알아야 한다(Alan Greenspan, 2005)”.
- 금융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결속력도 높아짐.
 - “금융교육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발전된 사회는 사회 결속력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이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회결속력은 국가 내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다면 그만큼 취약해질 수 있다. 국가 내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부의 창출과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Donald Johnson, OECD 사무총장, 2005)”.

□ 각국의 금융교육 강화 위한 제도화 노력

○ 미국

- 미국은 금융이해도와 교육 개선 법에 의거해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을 2003년에 만들었음.
- 정부와 민간부문이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강화 목적
- 연방정부의 금융교육을 조정하고 금융교육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적인 금융교육웹사이트를 운영

○ 영국

- 금융서비스와 시장 법령에 의거해 2000년에 Financial Service Authority(FSA) 설립
- FSA는 규제기관으로 소비자 교육 위탁
-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의 신뢰성 유지하고 금융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 예방
- 영국에서는 FSA 외에도 금융교육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지만 FSA는 좀더 포괄적이고 규제 관련 사안에 집중

○ 호주

- 2004년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FLF)를 만들어 학교 및 직장에서의 소비자 및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강화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금융 교육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즉 소비자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람들의 행동 변화 수반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 Braunstein(2002)

- O'Connell(2007), Dixon(2006) 등에 따르면 학교 기반 금융교육은 행동 변화를 가능케 하고, 직장 교육은 다수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유효한 방법으로 평가

- 자발적인 분야나 동료 간 네트워크는 금융 교육 전달에서 커다란 영향력 행사

- Lyons(2006)은 미국의 금융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electronic evaluation toolkit"이 필요하다고 지적

- 평가 매뉴얼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 교훈

- 부가 경제교육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더 나은 소비자 정보와 교육 기능 수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화

- 지방 교육기관(우리나라 경우 지방 교육청), 경제교육 수행 기관,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해서 소비자 이슈 관련 전반적인 교육 체계 수립

-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후 평가 시스템 필요

- 미국의 경우 시험, 서베이 등 객관적인 수단을 동원해 참가자들의 태도, 지식, 행태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도록 제안

IV. 경제교육 수요, 어떻게 늘릴 수 있나?

1. 경제교육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수요 증진 방안

□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강화를 통한 경제과목 수요 증대

— 우리나라 사회 과목은 교사공급 측면의 이해관계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단시일 내에 일반사회과목의 시수 및 교사 공급체계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계는 이런 현실을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경제과목 교육의 연속성 유지 필요성

○ 현재는 경제과목을 4학년(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6학년(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9학년(민주시민과 경제생활, 시장경제의 이해), 10학년(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에서 배우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0학년에서 배우는 거시 관련 내용을 9학년으로 내리고 10학년에서는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임.

○ 현재 10학년에서 다루는 거시경제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1학년 이후 심화선택 과목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경우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경제과목을 배우는 학생이 적는데 그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 현실적 수업 운영과 경제과목 학습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거시관련 내용을 10학년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목 개정 과정에 대한 제언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이 교육부와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과과정이 기존 교육 공급 체계 틀 내에서만 검토되어 왔음.

— 그러므로 기득권 집단의 이익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확대되어지기도 함.

-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과 교육과정 자문위원 15명은 5명의 초중고 교장, 10인의 교육 관련 교수로 구성되어 있음(지리 교육 3인, 사회교육 4인, 역사교육 2, 교육학 1인)
 - 사회과 교육과정 공동연구위원 역시 교사와 교육 관련 교수들로만 구성
 - 사회과 교육과정 협력연구위원 역시 전원 교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으로 구성

- 교과목 개정의 근본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변동, 국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교육 공급 체계 및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 하는 교과 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는 일반사회 과목 중 경제 관련 내용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작업 역시 경제학계 및 경제계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경제학계의 소수의 인사 참여로 이루어져 왔음.
 - 향후 학회 차원에서 참여 방안을 검토

- ⇒ 교과목 개정 과정 시 교육공급 체계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 외에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교사 공급 체계 개선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 박명호(2006)에 따르면 교사의 경제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경제관 역시 합리적 근거보다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교사의 낮은 경제 이해도는 우리의 교사 공급체계를 보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되어질 수 있음.
 - 교사가 특정 주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경제교육 및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사회과 교사의 교육, 연수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 경제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제과목 이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및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교사의 경제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2. 정부 역할 강화 통한 경제교육 지원

□ 경제교육 강화로 인한 사회적 후생 증진

- 합리적 사고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
 - 거래비용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0~40%
 - 그 중 합리적 사고의 함양으로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 있음.
 - 시장경제 질서 구축으로 인한 제도개선 효과 역시 총요소 생산성 증대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개인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교육은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지님.
 -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NCEE 등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 행위를 통해 경제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경제 선진화 조건으로서의 경제교육

-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교육 영역에서의 정부 지원은 절실하다고 하겠음.
 - 정부 행위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교육 관련 실태조사, 교재개발, 강사지원, 조사 연구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 부처 간 상호 업무 협조 및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제교육 관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음.
 - ⇒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은 실제로 경제교육을 주관하는 민간 경제 단체들과 학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임.

3. 민간단체의 지원 강화

- 청소년 및 경제교사 등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 현 시점의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강화는 결국 미래 우리 기업을 위한 투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경제 단체 및 금융기관들은 자신 기관의 고유한 사업 영역 내에서 경제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단체들의 경제교육은 자칫하 다가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와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 경제 단체들은 일선에 직접 나서서 경제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계 등을 지원해 주는 간접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4.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의 도입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 도입을 통한 경제교육 수요 증대

-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사고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 특히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개인의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경제강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따라서 학생이나 시민,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취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사회적 수요와 경제·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국내에는 영어·한국사·한자 등 해당 과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습득, 그리고 국가·사회적 편익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공인 검정 시험이 운영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음악 분야에서 등급시험은 음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음악 교육 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경제교육 수요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됨.
- 기존 경제 관련 시험 문제는 출제자들에 따라 문제의 유형, 내용 및 변별력 등에서 변동성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음. 그렇게 때문에 응시자들이 시험 준비를 위한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경험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험문제를 출제 관리한다면 응시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도입되는 경우 우선 대학에서 경제원론 및 기초 경제과목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중고등학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경제교육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거나 내부 인력의 승진 임용 시에 인증시험을 활용할 수 있음.
 -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런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지는 경우 우리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선택 기회가 확대되어지리라 기대됨.
 - 일반 국민의 경제마인드를 함양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공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
- 음악에서 등급시험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듯이 「경제이해력 인증시험」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됨.

- 기업의 인사제도가 이미 잘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경제이해력 인증 시험」을 채용 및 승진 시 직접 고려하기 어렵겠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는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참고: 음악 등급 시험

- 음악 분야에서는 개인의 음악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을 음악 등급시험이 있음.
 - 흔히 Grade시험이라 부르는 음악등급시험의 자격은 각종 악기의 실기나 음악이론, 또는 앙상블 등을 필기나 실기시험을 거쳐 획득하고 있음.
 - 실기시험은 악곡의 연주와 함께 시창과 청음 등의 시험이 포함.
 - 이론시험은 악전, 대위법, 화성법, 작곡법, 악곡분석 등의 능력을 필기 시험을 통해 테스트
- 음악 등급시험은 양질의 음악 교육을 가능케 하면서 동시에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
- 음악등급시험은 영국의 Trinity College의 Trinity 음악 등급시험, 그리고 ABRSM, 호주 국내에 board가 있는 AMEB 등이 있음
- Trinity college
 - 영국의 명문 학교인 Trinity College에서 만든 음악등급시험으로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시험
 - 악기에 대한 실기능력시험과 음악이론 시험이 있고 실기와 이론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의 실기 또는 이론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편임.
- ABRSM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 영국 왕립음악원 산하의 4개 학교에서 연합하여 만든 시험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시험
 - 2007년 현재 세계 98개국에서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35가지의 악기와 음악이론, 재즈, 합창 등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볼 수 있음.

- AMEB(Austrian Music Examinations Board)
 - 현재 호주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는 음악등급시험으로 1887년 에들레이드 대학과 멜번 대학에서 태동되어 1918년 전국적인 규모의 기구가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험
 - 음악 외에도 스피치와 드라마, 발레 등의 등급시험을 이 기구를 통하여 볼 수 있음.
- 보통 자격시험은 각자가 치른 시험 점수로 판정하는 것과 달리 음악등급 시험은 본인이 자신의 실력에 맞는 등급의 시험을 본 후 점수에 따라 자격의 여부를 판정받는 방식임.
- 음악등급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
 - 사립학교 등에서 장학생 선발 시, 혹은 좀 더 명성 있는 학교로 전학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음악 실기교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음악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각 급 학교에서 음악실기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임.

< 참고문헌 >

- Braunstein, Sandra, and Carolyn Welch. 2002. "Financial Literacy: An Overview of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Federal Reserve Bulletin* (November): 445-457. Washington.
- Dixon, Mike. 2006. *Rethinking Financial Capability: Lessons from Economic Psychology and Behavioural Finance*.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Johnston, The Hon. Donald J. 2005.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in the Global Economy*. Keynote address to the "Financial Education Summit." Kuala Lumpur. December 12, 2005.
- Lyons, Angela C., et al. 2006. "Are We Making the Grade? A National Overview of Financial Education and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December).
- O'Connell, Alison. 2007.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Retirement Commission for a seminar to be held April 19, 2007. Accessed at http://www.retirement.org.nz/files/Measuring_effectiveness_of_financial_education_OConnell_published_April07.pdf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a. *Draft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DAF/CMF (2005)13. Pari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b.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c.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Announcement of publication and outline of publication. OECD website.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Pari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e. *Thirty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Pari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a. G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November 29-30, 2006.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b.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Observer*, July 2006.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c. OECD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September 21-22, 2006.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 *OECD's Financial Education Project*. Pp. 223-228. Retrieved February 5, 2007.

박명호,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2006

재정경제부, 경제교육 활성화 및 법제화 필요성, 2007.10
전홍택·김진영,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2006.
최병모, 김정호, 허인숙,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학생들의 시장경
제인식 및 의식의 현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제교육연구,
11(1), 한국경제교육학회, 83-108, 2004.

지정토론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지정토론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 : 문승래(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 발표 :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영섭(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진영(KDI 경제교육실장)
- 토론 : 김진영(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영섭(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진영(KDI 경제교육실장)

- I.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의 중요성
- II. 경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III. 개정 경제교육과정의 평가
- IV.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I.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의 중요성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또 저축자와 투자자로서 경제적 선택에 직면하게 됨. 경제교육의 목적은 그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을 키워 주는 것임.
 - 경제교육은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적응능력을 배양시켜줌.
- 경제교육은 시장경제제도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에도 기여함.
 - 시장경제는 시장참여자들이 경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원활하게 작동함.
 - 경제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경제사회현안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

- 최근 들어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이 경제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 금융 산업의 발전, 그리고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임.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임, 즉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짐.
 - 금융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이 계속 출현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한편 생애주기에 맞게 금융자산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이해력이 중요해짐.
 - 선진국에서는 복지제도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종래의 공적연금제도로는 은퇴자들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개인들의 저축증대를 통해 노후생활 보장을 보강할 필요가 대두됨.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경제·금융 교육을 강조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 금융 산업의 발전, 고령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해소를 위해서도 경제이해력을 향상시켜주는 경제교육이 더욱 중요해짐.
-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 발전체제에서 시장중심 발전체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는 아직도 정부주도 발전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학생들은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운용되며, 정부의 주도 없이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자신이 창업을 할 때 최선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들은 지나치게 영리만 추구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경제논리는 감성이 결여된 차가운 것이어서 사회를 훈훈하게 하기보다는 대립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 이러한 그릇된 인식 및 이해부족은 상당 부분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서 기인함.
-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경제의 내용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접하더라도 흥미 없이 피상적으로만 접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교과내용이 왜곡되어 있고 내용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 경제교육의 부실로 경제에 대한 오해 및 무지가 확산되는 경우 결국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큼.
-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오고 미래의 경제력은 현재의 경제교육 수준에 영향 받는 경향이 큼.
- 세계 각국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정부, 공공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경제교육협의회 (NCEE)¹⁾, 연방은행(FRB) 등 다양한 기관들이 경제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및 정부도 법률 제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법(Educate America Act, 1994)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K-12)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 중 하나로 경제학을 선정

1)미국의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임. 미연방법은 경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연방정부는 NCEE의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사연수 등의 경제교육 지원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제교육향상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2004)을 제정하여 경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경제교육협의회(NCEE)를 5년간(2004~2008) 매년 150만 달러 지원.
 - '금융이해력향상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3)을 제정하여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5년간 5억 달러를 투입하여 국민대상의 금융교육을 지원.
-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부 경제·재무성이 주축이 되어 2005년을 '경제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교육 서미트를 개최해, '경제교육 추진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교육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OECD도 금융무지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제고에 따라 2003년부터 금융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회원국들에게 금융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제교육협의회가 출범하고,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음.
 - 2007년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제교육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지속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함.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반영되는 부분은 여전히 미진함.
- 본 연구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고 2007년 개정된 경제교육과정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평가하고자 함.
 - 아울러 이를 토대로 향후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경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제과목의 중요도 및 선호도

(1) 우리나라의 실태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7~10학년(중1~고1) 기간 중에 배우게 되는데, 경제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7~10학년 총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1/4,692)이며, 사회과 총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1% (=31/510)에 불과한 실정임.

<표 1> 국민공통과정 사회과목의 단위 구성 및 수업시간

	지리		세계사		국사		일반사회				합계	
							정치, 법, 사회문화		경제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단위	시간	단위	시간
7학년	7	71	3	31	--	--	--	--	--	--	10	102
8학년	--	--	4	37	4	37	3	28	--	--	11	102
9학년	2	21	--	--	6	63	3	31	2	21	13	136
10학년	4	41	2	20	6	68	3	31	1	10	16	170
합계	13	133 (26.1)	9	88 (17.3)	16	168 (32.9)	9	90 (17.6)	3	31 (6.1)	50	510 (100)

주: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냄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이러한 문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11~12학년(고2~고3)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은 사회과목 전체의 9.7%(=102/1,054)에 불과

<표 2>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의 수업시간

지리			역사		일반사회				합계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136	136	102	136	136	102	102	102	102	1,054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에서도 경제 과목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사회과목 선택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 선택은 총 9 개의 사회과목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에 이어 4위를 차지
 - 경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2007년 현재 1,457개 학교 중 40%인 606개 학교에 불과

<표 3>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목 선택 현황

과 목		학생 수		순 위
		2006	2007	
지리	한국지리	245,122	254,291	2
	세계지리	46,592	47,607	8
	경제지리	26,189	26,074	9
역사	한국근현대사	284,146	304,586	1
	세계사	75,337	70,133	7
일반사회	법과 사회	84,950	81,693	6
	정치	105,943	106,705	5
	경제	110,760	112,447	4
	사회문화	230,152	241,172	3
학교수 (개)		1,437	1,457	
경제 과목 채택 학교수 (개)		589	6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또한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도 경제 과목은 총 11개 과목(윤리 및 국사 추가)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 정도의 선호에 그침: 사회탐구 응시자 대비 27.8%, 총응시자 대비 16.0%를 보임.

<표 4> 대학 수능시험 응시 현황 (2007)

과목		학생 수	순위
윤리		161,421	4
국사		69,507	7
지리	한국지리	214,499	2
	세계지리	37,917	10
	경제지리	54,289	9
역사	한국근현대사	168,414	3
	세계사	33,120	11
일반사회	법과 사회	62,434	8
	정치	106,392	5
	경제	88,068	6
	사회문화	227,422	1
사회탐구 응시자		316,490	
총 수능 응시자		551,884	

주: 경제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 응시자 대비 27.8%, 총수능 응시자 대비 16.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외국과의 비교

- 미국에 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경제과목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50개주 모두 경제학을 교육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주요 17개주²⁾는 경제과목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7개주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과목을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
 - 미국에서도 경제과목의 선호도는 사회과목 중 중간 정도(총 7과목 중 4위)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제 과목 수강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0%에 달하며 다른 과목에 비해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남.

<표 5>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과목 이수 비율(%)

	1982	1990	1998
경제	24.1	43.6	45.8
미국 역사	81.5	91.2	90.5
미국 정부와 정치	62.2	77.4	81.2
세계사	36.3	51.9	60.2
서양사/문화	11.4	10.3	9.1
사회학/심리학	32.4	32.6	32.7
지리	16.0	21.4	24.5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lstad(2005)에서 재인용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제과목의 위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남.
 - 고등학교 사회과목 총 24단위 중 정치·경제 과목은 겨우 2단위에 불과해 경제과목 비중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2)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인구가 많은 핵심 주와 알라바마,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임.

- 대학시험에서도 정치·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학교에서의 정치·경제 과목 선택비율도 1/3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6>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목 단위수

지리·역사						공민			합계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2	4	2	4	2	4	2	2	2	24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영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경제과목의 상대적인 위상은 낮은 것으로 짐작됨.
 - 영국정부는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핵심 내용인 시민사회(Citizenship)란 과목을 도입하였음.
 - 재무부와 교육직업부가 협력하고 금융서비스청(FSA)이 주관하여 영국인의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사업(국가 커리큘럼 개정, 웹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실시 지침을 제시하여 전 학년에 걸쳐 개인금융 교육을 강화.
 - 중국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경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사실상 공식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학생들의 경제 관련 과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큼.

2. 교육현장: 교과내용 및 교수방법

(1) 우리나라의 실태

- 학생들은 경제교육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교육의 교과내용이나 교수방법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받는 경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49.5%가 보통 이상으로, 36.1%가 보통이라고 답변 반면 보통 이하는 12.2%에 불과

- 경제교육의 문제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관련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음.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남.

<표 7> 학교 경제수업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초등학교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	12.6	8.0
그런 편이다	40.3	41.5
보통이다	38.5	3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	9.2
전혀 그렇지 않다	1.8	3.0
무응답	0.2	2.3
	총 2,307명	총 1,916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표 8> 타 과목(영역)에 비교한 상대적 난이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우 그렇다	4.3	4.0	7.3
그런 편이다	19.8	26.8	37.3
보통이다	59.5	48.4	3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4	18.2	11.5
전혀 그렇지 않다	2.9	2.6	1.8
무응답	---	---	2.4
	총 2,307명	총 1,399명	총 1,916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교과내용 문제점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의 목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임.

-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경제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느낌을 줌.
-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실용적인 항목보다는 이론적 측면,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항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경제교육 목표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적인 경제이론 및 개념	3.30	3.57
실용적인 경제지식 습득	3.23	3.11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3.43	3.31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3.36	3.39
	총 1,399명	총 1,916명

주: 각 항목의 최고점수는 5점 만점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교수방법도 개념설명 위주로 되어 있고 실생활과 직결된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과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방식은 설명식 수업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설명식 수업이 가장 높으며 역할놀이 수업이나 토론 수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음.
- 설명식 수업에 비해 다른 방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0> 경제관련 과목(영역)의 수업방법 (%)

	중학교	고등학교
설명식 수업	33.0	38.4
토론 및 토의	11.6	10.9
인터넷 및 신문 활용 수업	16.0	16.8
역할놀이	8.9	7.8
시뮬레이션	10.0	8.8
모둠 및 협동학습	14.3	10.3
기타	6.2	6.9
	총 4,050명	총 4,758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표 11> 수업방법에 따른 만족도

	중학교	고등학교
설명식 수업	3.27 (1)	3.48 (1)
토론 및 토의	2.77 (7)	3.14 (3)
인터넷 및 신문 활용 수업	3.18 (3)	3.42 (2)
역할놀이	2.89 (5)	2.76 (7)
시뮬레이션	3.22 (2)	3.08 (5)
모둠 및 협동학습	3.04 (4)	3.01 (6)
기타	2.87 (6)	3.13 (4)
	총 4,050명	총 4,758명

주: 각 항목의 최고점수는 5점 만점. ()안의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2) 외국과의 비교

-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 목표나 교과과정 운영 등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현명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문맹을 탈피하기 위해 기초교육이 필요하듯 경맹(economic illiteracy)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은 Framework for Teaching Basic Economic Concepts 및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³⁾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 중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특화된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점,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적인 교육을 한다는 점, 그리고 금융을 많이 강조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전통에서 탈피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교육 목표는 경제학의 기본개념, 경제구조 및 제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독특한 길을 걸어 온 자국의 경제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제교육 내용은 과거 전통이 일부 남아 있어,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과거의 전통이 상당히 퇴보하고 저축보다는 투자를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전환됨.

3)NCEE가 경제학자와 교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1984년에 Framework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사회과목들이 국가 차원의 내용 표준 체제를 작성함에 따라 Framework를 기초로 하여 1997년에 Standards를 작성한 바 있음.

- 영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공공의 이슈들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경제교육(및 경영교육)의 목표를 경제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산업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태도, 인성 및 사회성 개발에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제교육도 미국의 경제교육처럼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결합해 교육하고 있지만, 경제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교육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 지속성장, 환경, 범세계적인 상호의존성 등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을 많이 다룬다는 점, 그리고 현실을 고려해 유럽경제 내에서의 영국의 위치 및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실용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중국의 경우 경제교육의 목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과는 상관없이 실용성을 강화하는 것임.
 - 중국의 경제교육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과 시장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고 창업교육, 금융교육 등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교육보다도 더 실용주의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12> 각국 경제교육 목표 비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체계적 경제지식을 토대로 한 민주시민 양성	경제지식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사회주의 교양 강화 및 풍부한 문명생활 영위 기반 마련	일상생활에서의 현명한 경제적 결정 능력 배양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성 개발

자료: 이지선(2006)을 이용해 정리

3. 교사공급구조와 교사의 경제이해력

(1) 우리나라의 실태

-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제과목에 대한 동기 유발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경제관련 과목(영역) 교사들의 출신학과(%)

출신 학과별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28.8	38.7
	공통사회교육과	3.3	2.6
	지리교육과	17.4	5.9
	역사교육과	15.1	3.1
	기타	4.1	7.6
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1.8	1.6
	공통사회교육과	0.3	0.3
	지리교육과	0.5	0.1
	역사교육과	---	---
	기타	---	---
일반대	경제학과	5.9	10.6
	비경제학과	15.3	17.3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3.8	7.2
	공통사회전공	0.3	1.0
	지리전공	0.3	0.1
	역사전공	0.8	0.7
	기타	2.3	3.1
무응답		0.8	---
		총 391명	총 682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중·고등학교에서 경제영역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출신 전공을 살펴보면 경제학과 비율이 겨우 5.9%(중학교) 및 10.6%(고등학교)에 불과하고, 경제영역 담당 교사들의 많은 수가 관련 강좌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거나 겨우 1~2과목만 수강함.
- 경제관련 과목(영역)을 수업하게 된 동기도 자신의 전문성, 관심 등에 따르기보다는 단순한 수업시수 배분에 따르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음.

<표 14> 학부 재학 시 수강한 경제학·경제교육 관련 강좌 수(%)

수강 과목 수	중학교	고등학교
없음	11.0	3.7
1-2 과목	36.1	24.6
3-4 과목	26.1	28.9
5과목 이상	26.1	42.8
무응답	0.8	---
	총 391명	총 682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표 15> 경제 관련 과목(영역) 수업 담당 동기(%)

담당 동기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관련 과목을 담당한 경험이 많아서	5.9	7.0
경제 수업에 자신이 있어서	2.8	7.2
학부 전공과 일치해서	21.2	28.3
교사 간 수업시수 배분 과정에서	56.0	46.3
기타	9.7	8.4
무응답	4.3	2.8
	총 391명	총 682명

자료: 경제교육협의회(2007)

- 경제담당 교사들에 대해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수준에서는 사회과목 교사 연수 기회가 약 14년 되어야 겨우 한 번 가능한 정도임.
 - KDI, 자유기업원 등 연구기관, 경제5단체, 한국은행, JA-Korea,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이수인원은 연 1,860명 수준으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 25,000여명의 약 1/14에 불과.
- 미국에서는 NCEE가 매년 12만명을 교육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 방법 공유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상황임.
- 사전적 및 사후적 교사 관리 시스템의 부실은 교사들의 경제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⁴⁾
- 교사의 경제 인지도 조사결과 교사의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인지도는 52.4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전경련 서베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경제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요소보다는 감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경제교육의 목표와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 외국과의 비교⁵⁾

- 외국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많은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제교사 교육을 통해 교수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은 경제학 기초과목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사회분야 교사들은 적어도 2개 과목을 이수해야 함.
 -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교사는 최소 6개 과목을, 그리고 전문(advanced)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10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4)박명호(2005)

5)이지선(2006)

-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NCEE는 각 대학과 연계해 매년 경제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경제교육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해,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전문 교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자주 지적됨.
 - 중고등학교의 사회나 공민 시간에 경제를 가르치고 있지만 담당 교사의 대부분이 역사 등 다른 분야를 전공해 효율적인 학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경제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미약함.

<표 16> 일본 중학교 공민과 교사들의 대학·대학원 전공 (%)

역사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사회학	지리학	심리학	경영학
24.6	22.8	13.5	12.3	11.7	9.9	3.5	3.5

자료: 전홍택·김진영(2006)

- 중국의 경우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과 시장경제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가르치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장경제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 정규교사들이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외국 교육기관(JA-China, IBM, HP 등)에게 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의뢰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교사양성은 정부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데, 모든 교사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해야 함.
 -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경제학(Economics) 혹은 경영학(Business Studie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교육대학원 과정 1년을 수료해야 함.

- 이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교습방법에 대한 숙련을 요구하고 있음.

4.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1) 경제이해력 시험 결과⁶⁾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표 17).
- 한미일 3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55.7점을 얻어 미국의 61.2점, 일본의 57.3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⁷⁾
- 또한 경제과목 수강 학생(57.7점)과 비수강 학생(54.7점) 간의 차이는 3.0점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경제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함.
- 경제교육이 심화될수록 미국에서는 경제과목 수강자와 비수강자 간 상대적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남.
- 이러한 특징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전문 교사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에서 연유된다고 판단됨.

<표 17> 한미일 경제이해력 테스트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57.7	54.7	55.7	64.3	47.6	61.2	57.2	57.7	57.3

자료: 유정호(2003)

6)유정호 (2003) 참조.

7)미국 NCEE의 경제이해력시험 문제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한국 및 일본의 고등학생들에게 테스트한 결과임.

□ 유럽국가, 중국 등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자료 여건 상 어려움.

- 그러나 유럽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과목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친화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2) 금융이해력 시험 결과⁸⁾

- 미국과 한국의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모두 6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한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45.2점(100점 만점)으로 미국 고등학생의 51.9점에 비해 더 낮은 수준(표 18)
- 한국 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돈 관리 영역 문항에서 제일 낮은 반면 미국 학생은 저축과 투자 영역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음.

<표 18> 한·미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비교¹⁾

영역	한국(2003)	미국(2000)
소득	48.7	57.6
돈 관리	39.2	46.8
저축과 투자	46.6	45.3
지출과 분석	44.0	52.1
전체 평균	45.2	51.9

1) : 동일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2000년에 측정하였으며, 한국은 2003년에 측정.
 자료: OECD (2005) P.99

8) 미국의 Jump\$Start에서 실시한 고등학생 대상 금융 이해력 측정을 위한 실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최소한 수정하여 사용한 시험 결과임. Jump\$Start는 1995년 미국에서 경제교육, 소비자교육에서 개인 금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합 조직임.

□ 돈 관리 방법 습득처는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들 모두 가족이 압도적이었음(표 19).

- 미국의 경우 돈 관리 방법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학생의 비율은 5%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도 가장 낮게 나타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금융교육이 매우 부족함을 시사

<표 19> 돈 관리 교육 및 경험과 금융이해력

	한국 (2003)		미국 (2000)	
	학생비율(%)	평균점수	학생비율(%)	평균점수
1. 돈 관리 방법 습득처				
가 족	50.2	46.4	57.4	51.8
학 교	5.0	37.2	12.8	51.3
친 구	8.3	41.7	2.1	35.6
잡지, 책, TV	13.6	47.6	3.4	53.7
개인경험	22.0	44.2	23.0	53.5
2. 부모와 돈에 대해 대화하는 빈도				
전혀 안함	13.8	40.9	6.7	42.5
어쩌다가	33.3	45.5	18.2	52.4
가 끄	41.4	46.6	39.1	52.6
자 주	10.9	44.6	34.7	52.6
3. 은행 거래 경험				
없음/모름	13.2	38.5	37.8	49.3
저축예금	8.4	40.6	41.0	53.8
당좌예금(수시입출예금)	56.2	47.5	7.3	45.6
저축과 당좌예금	21.1	45.3	18.2	54.9

□ 양국 모두 가정에서 부모와 돈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학교 외에 가정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표 19)

- 한국의 경우 부모와 돈에 대한 전혀 대화가 없는 학생의 비율이 미국의 두 배로 나타남.

- 양국 모든 은행거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금융거래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시사(표 19)
- 미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1997년에서 2002년까지는 하락하였으나 하락 추세는 2004년 반전되어 2006년에는 2004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20).
 - 한국은 2003년과 2006년 두 번의 시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금융이해력 점수가 3점 상승하였으나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또는 추세적 변화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움.

<표 20> 고등학생 금융이해력의 변화 추이¹⁾

	미 국	한 국
2006	52.4	48.2 ²⁾
2004	52.3	
2002/2003 ¹⁾	50.2	45.2 ³⁾
2000	51.9	
1997	57.3	

1) 미국은 2002년, 한국은 2003년

2) 미국 Jump\$tart가 제시한 고등학교 3학년 금융소비자 교육 기준과 현행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생 사회과목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출제됨.

3) 미국 Jump\$tart의 문제를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그대로 사용
 자료 : OECD (2005), 금융감독원 (2003, 2006)

5.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영역⁹⁾

(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경제체제의 내용이 기초경제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선언적 지식으로 받아들여 암기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

9) 여기에 제시한 내용은 KDI 경제정보센터, '초, 중, 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2006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내용 체계와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제7차 교육과정¹⁰⁾은 시장경제의 특징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체제를 배우는 배치임. 이러한 편제는 시장 기능과 가격결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장경제를 계획경제와 특성과 비교하는 것과 같아 논리적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기능을 먼저 배운 후에 시장경제의 특징인 자유로운 거래,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을 배우고 시장질서 조정자로서 정부 역할 등을 학습하는 자연스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음.
- 경제주체들의 윤리적 경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5개 소단원에 걸쳐 제시되고 있어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가르쳐야 할 경제과목의 취지를 퇴색케 하는 편제임.
 - 소비자, 근로자, 생산자, 민주 시민의 역할을 다루는 내용이 경제주체들의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앞에서 학습한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경제 문제 해결인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의 비교, 비용 대 편익 분석 등과는 동떨어진 경제 문제의 해결을 배우는 셈임.
 - 미시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시장경제의 이해’ 단원에 포함된 소단원, ‘올바른 경쟁’과 ‘과도한 사익추구 방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도 기업들이 맹목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게 할 우려가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강화 추세에 있는 금융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의 신용 관리, 자산 관리, 채무 관리, 재무 설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소단원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주체의 노력’에서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는 것도 경제 문제의 해결이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비경제적 논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10)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해설(총론)’, 2003년 참조.

-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로 인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을 기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2) 심화선택교육과정

- 시장경제의 성격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경제체제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성은 시장 경제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교육 과정의 목적에 맞지 않음.
- 제7차 교육과정은 '시장 기능'과 '시장 실패'를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시장의 실패와 불법, 부당행위의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시장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고 시장 기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왜곡,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제7차 교육과정은 각 단원에 필요에 따라 '우리 경제'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3개 소단원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경제를 가르치는 내용이 많아 핵심적인 경제 원리의 학습 시간 부족을 초래함.
 - 남북통일 관련 단원은 통일 우리 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예상을 다루고 있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경제력 차이)나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와 장단기 문제점을 학습하는 데에 부족
- 이외에도 제7차 교육과정은 경제교육에 있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와 '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치와 윤리 교육은 ‘윤리’ 과목의 일부로 가르친다 해도 충분하며, ‘경제’ 과목에서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습득하고 경제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경제학 원론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있음. 물론 이론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경제 영역의 모호성이 커져 학습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경제학의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비교적 골고루 포함시키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생활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함.

III. 개정 경제 교육과정의 평가

- 1997년에 개정되어 200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왔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2007년 개정되었음.
- 2007년 2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될 것임.¹¹⁾
- 여기서는 2007년 2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과 과목의 경제 영역 관련 내용 체계에 대한 특징을 분석 평가하고자 함.

1.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특징¹²⁾

- 현행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 경제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거시 경제단원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와 거시 경제단원을 함께 배우도록 하였음(표 21).

11)각급 학교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 2010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2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2013년 고등학교 3학년의 순서로 적용

12)KDI 경제정보센터(2006)에서 특징적인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음.

<표 21>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신구 교육과정 비교

현행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란 무엇인가 2.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3. 경제활동의 역사적 변천 4. 자유 시장 경제의 장점 5. 산업에 따른 사회의 변화 6. 미래 경제의 전망 7. 민주시민의 소비자 역할 8. 근로자, 기업가의 자세 9. 시민의 경제적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소성의 의미, 다양한 사례 2. 합리적 선택(효율, 형평, 장기) 3. 분업과 교환, 상호의존 4. 경제체제와 경제문제 해결 5. 경제주체(소비, 생산, 정부) 역할 6.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의 재무 설계 	<p><기초경제></p> <p>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중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경제의 특성 2.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 3. 가격의 결정 4. 가격의 변동 5. 가격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 6. 시장 경제의 경쟁질서 7. 올바른 경쟁질서 8. 과도한 사의 추구방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요와 공급, 영향을 주는 요인 2.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3. 자원배분 역할로서 가격 기능 4.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5.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 	<p><미시 경제></p> <p>시장경제의 이해 <중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소득과 경제 순환과 변동 2.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3.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경제정책 4. 물가문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 5. 실업문제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6. 국제 거래 및 환율 	<p><거시 및 국제></p> <p>국민경제의 이해 <중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경제 활동 지표 2. 국내 총생산의 의의와 한계 3. 경제 성장과 그 요인 4. 현대 사회의 경제문제 5. 실업과 그 해결방안 6. 인플레이션과 그 해결방안 7. 경제의 세계화 8. 세계시장과 국제 거래 9.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2. 정의 3. 세계화 4. 인권 5. 삶의 질 	<p><고1 사회></p>

- 즉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던 국민 소득, 경제 순환, 물가, 실업, 국제 거래 등의 거시 경제 분야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새롭게 편입되게 됨.
- 현행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은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 일반사회는 다시 정치, 경제, 법, 문화 영역으로 영역별 분리하여 학습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표 21)
- 문화, 정의, 인권, 세계화, 삶의 질 등 5개 주제에 대해 정치, 경제, 법,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하고자 함.
-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들도 상당부분 바뀌었음(표 21).
- 현행 교육과정의 기초경제 단원(경제생활과 경제문제)중,
 - 소단원 '자유 시장 경제의 장점'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시 경제단원('시장 경제의 이해')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소단원 '산업 사회의 변화', '미래 경제의 전망'은 비슷한 내용이면서 기초 경제 단원에서 학습하기에 애매한 내용이여 삭제되었음.
 - '민주시민의 소비자 역할', '근로자·기업가의 자세', '시민의 경제적 의무' 등 3개 소단원은 '경제주체(소비, 생산, 정부)의 역할'로 하나의 소단원으로 통합
 -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던 '신용 및 자산 관리 등 재무 설계'가 소단원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음.
- 미시경제 단원(시장경제의 이해)은,
 - 현행 교육과정은 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 학습 없이 곧바로 시장경제의 특성과 제도적 원칙을 배우고 있음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은 가격의 결정을 학습하고 난 후 가격의 기능을 배우도록 바뀌었음.
 - 개정 교육과정의 미시경제 단원(시장경제의 이해)에는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현행 교육과정의 소단원 '과도한 사익 추구하고 공동체의 실현' 내용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음.

(2)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평가

- 개정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 요소들이 적절한 대단원에 재배치되어 단원간의 학습연계성이 높아졌으며,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이 강조되었고, 부족했던 금융부문이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되었음.
 -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학습하고 난 후 가격 기능을 학습하도록 한 것과, 자유 시장 경제의 장점을 기초경제단원이 아닌 미시경제단원(시장경제)에서 학습하도록 바꾼 것은 연계성을 고려한 구성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소단원('민주시민의 소비자 역할', '근로자·기업가의 자세', '시민의 경제적 의무', '과도한 사익추구와 공동체 실현')은 경제보다는 윤리 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임.
 - 또한 신용, 자산 관리 등 재무 설계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그동안 지적되었던 금융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였음.

- 그러나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문제점이 적지 않음.
 - 수업시간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경제영역뿐 아니라 거시경제영역까지 함께 학습하게 됨으로써 수업내용이 크게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
 - － 학생들의 인지력 발달 수준에 비춰볼 때, 추상성이 매우 높은 거시경제영역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룰 경우, 학습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주제 중심 교육 취지 즉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 보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제중심 교과서를 집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임.
 - － 통합 교육 방식의 교과서 개편은 상당한 전문가들에 의한 협업의 산물이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내용이나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분야까지 있어 이를 어떤 틀로 교과서에 담아낼 것인가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주제 중심 방식으로 가르칠 교사도 통합 학습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됨. 현재와 같은 교사 양성 체제로서는 통합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임.
 - 개별 주제의 학습에 있어서도 어떤 주제는 사전적으로 경제 지식과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교사가 어떻게 조직하고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가르칠 것인가도 커다란 과제
- 5개 주제에 대한 통합 교육은 그나마 부족한 경제 영역의 수업 시간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문화, 인권, 정의 등 3개 주제는 경제 영역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주제이며, 나머지 2개 주제인 세계화와 삶의 질이 경제 영역과 밀접하다고 하더라도 경제 수업에 할애되는 시간은 축소될 전망이다.
 -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은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운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의 교육 내용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¹³⁾
- 경제가 실물 중심 경제에서 금융 중심 경제로 추세가 이동하고 있음에 비춰 금융 교육의 내용이 여전히 부족함.
 - 금융상품의 복잡화, 고령화, 금융의 글로벌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EU국가들은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2.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

(1)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의 특징

-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는 '경제' 과목으로만 한정하여 분석하였음.¹⁴⁾

13) 미국의 사회과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가 90년대에 11명의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커리큘럼 표준(Curriculum Standard for Social Studies)은 10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초, 중, 고별로 학습할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례까지 각급 학교별로 제시하고 있다.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1992), 'Curriculum Standard for Social Studies'를 참조하였음.

14) 선택 과목 '경제'는 두산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하였다. 국민공통과정과 마찬가지로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소개된 최소 단원을 제시한데 비해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대강화 내용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필될 교과서와는 다를 수 있음.

- 개정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원론의 이론적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한국 경제 내용을 크게 축소하였고, 통일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음(표 22).
 - － 현행 교육과정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학습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으며, 통일 관련 3개 소단원도 삭제하였음.
 - － ‘시장과 경제활동’ 단원은 현행 교육과정이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시장실패를 학습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습득한 후, 별도의 단원에서 시장실패를 학습하도록 설계.
 - － 현행 교육과정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의미를 학습시킬 것으로 예상됨.

(2)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의 평가

- 개정 심화선택교육과정의 ‘경제’ 과목은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경제 이론 흐름과 적합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경제와 통일관련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음(표 22).
 - ‘경제’ 과목의 수업 시간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되었으며, 경제 수업의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럼에도 개정 교육과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¹⁵⁾을 지적하면,
 - 둘째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생산요소’가 전통적인 생산요소만을 다룰 경우 실생활과 유리된 암기식 지식만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보다는 혁신 정신, 도전정신, 위험부담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5)KDI 경제정보센터가 2008년 4월, 경제학, 경제교육, 경영학 등 관련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경제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임.

<표 22> 심화선택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신규 교육과정 비교

현행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생활의 의미 2. 경제생활의 상호 의존성 3. 희소성과 경제문제 4. 경제정보의 활용 5. 경제 체제 6. 자유시장경제와 한국 경제의 발전 7. 자유 시장 경제와 한국경제 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소성과 기회비용 2. 경제문제, 비용-편익 3. 경제적 유인 4. 교환, 시장 경제 제도 5.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계의 경제 활동 2. 합리적 소비, 바람직한 소비 3. 기업의 경제 활동 4. 경제 환경 변화와 효율적인 기업경영 5. 정부의 경제 활동 6. 정부의 활동과 재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 요소 2. 소득, 소비, 저축, 신용, 수입, 비용, 이윤, 기술 3. 생산성, 재정활동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의미와 원리 2. 가격의 기능과 시장의 경제적 역할 3. 경제활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 4. 시장의 가격결정 5. 시장 가격의 변동 6. 시장기능의 한계 7. 시장기능의 보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요, 공급 2.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3.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4. 시장 균형, 탄력성 5. 경쟁시장, 잉여 	시장과 경제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경제의 순환 2. 국민경제 지표의 이해 3.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 4.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5.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6. 경기변동의 양상과 예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실패 2. 외부성 3. 공공재, 독과점, 진입장벽, 정보 4. 소득분배, 재분배 5. 규제, 정부실패 	시장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경제의 순환 2. 국민경제 지표의 이해 3.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 4.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5.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6. 경기변동의 양상과 예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소득 2. 물가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성장 3. 총수요, 총공급 4. 실업, 인플레이션 5. 중앙은행, 재정정책, 금융정책 	국민경제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화와 국제거래 2. 비교우위와 국제경쟁력 3. 환율과 외환시장 4. 국제수지 5. 통일 한국의 경제 문제 6. 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 7. 통일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경제 선진화 방안 8. 세계 경제의 동향 9.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의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역의 이익 2. 자유무역, 보호무역 3. 무역정책 4. 외환시장, 환율 5. 국제수지, 자본이동 6. 국제 경쟁력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

-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단원 에서 소득, 소비, 저축, 신용 등을 독립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개인금융’이라는 소단원을 만들어 각 개념들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단원인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에서 시장과 정부를 대립 구도로 인식할 위험이 있음.
 - 정부의 역할로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사유재산제도의 보호(재산권 제도), 자유계약의 강제 이행 담보 등과 같은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강조하여 시장과의 보완적 관계를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함.
 - 첫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 경제 제도를 이 단원으로 옮겨와 함께 다룬다면 내용의 연계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아 질 것임.
- 다섯째 단원인 ‘국민경제의 이해’에서 ‘총수요, 총공급’을 다루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이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거나 교사들이 가르치기 쉽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임.
 -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업,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 거시 경제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원인, 효과, 이해득실, 정부나 개인의 대처 방안을 다루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할 것임.
- 여섯째 단원인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소단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FTA가 출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 대 보호 무역과 같은 논란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으며, FTA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다루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임.

IV.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 제언

1.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계, 경제교육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언론이 협력하여 경제교육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
 - 경제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DI, 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간단체(대한상의, 전경련, JA-Korea, 전국은행연합회 등), 그리고 언론기관(중앙일보 토티경제, 매일경제신문 어린이 경제교실,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등)들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심점이 없으며 사회적 인식도 아직 부족한 실정.
- 미국에서는 의회가 경제 및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경제·금융교육이 커리큘럼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조직들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 민간단체들도 NCEE 등 수많은 비영리조직들이 경제·금융교육 확대 캠페인을 미션으로 하여 경제담당교사 재교육, 경제교육자료 개발·보급,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공헌자 시상, 경제·금융교육 웹사이트 사업 등을 추진.

2. 경제 이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

-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의 확대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제영역 수업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수업 시간의 확대는 다른 과목과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교사들이 경제적 사실과 경제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간접 지원책을 모색

- 부족한 경제 수업은 창의 재량 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 통합 교육이 가능한 자료의 개발 등과 같은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심화선택중심교육과정은 보다 많은 고등학교가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현재 전체 고등학교의 40%에서만 경제과목 선택이 가능)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경제과목의 필수화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고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경제' 과목을 수강하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주정부가 경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 따라서 관련 학계, 기관, 교사단체 등이 협력하여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과목의 필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경제 과목이 필수화되기 전까지는 보다 많은 학교들이 경제 과목을 선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경제과목을 선택으로 제공하는지, 새로이 경제를 선택한 학교가 어떤 이유로 선택한 것인지, 선택권이 교사의 영향력인지, 교장의 영향력인지, 학생(부모)의 영향력인지, 경제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경제교육의 확충에 유용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

- 중학교 3학년의 미시 및 거시경제 분야의 학습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주제 중심 교육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체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경제 교육의 연계성, 효과성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함.
 -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미시경제영역만을 다루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거시경제영역을 다룸으로써 경제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함.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은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나 교과서 등 실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영역별 교육으로 환원하고 한정된 지역에서 주제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방안이 바람직함.

- 미국에서 사회과 통합교육으로 연구된 자료를 보더라도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그 내용 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 및 사례가 제시된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전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주제중심 통합교육의 졸속시행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과 교육 전체가 부실화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와 같이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 체계가 교육과정 때마다 크게 바뀌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도록 학계의 전문가들이 고민하여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음.
 - 지난 2007년 경제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교육 표준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이 연구에 따르면 ‘기본개념’ 12개, 기본 개념별로 2~5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내용요소’ 31개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감안한 주제들로 구성¹⁶⁾
 - 금년 경제교육학자들이 중심이 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지난 연구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기본개념의 연계성 강화, 학교 급별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한 표준 내용 서술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
 -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는 초, 중, 고 경제교육의 교과 과정 콘텐츠구성과 구체적 활용은 물론 표준 교재 없이 수행되는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에도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임.

□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 미국은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교사의 경우 경제학을 최소 6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영국에서는 경제 교육 담당자들은 해당 분야의 학위와 교육 대학원 과정 1년을 수료해야 하는 등 경제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DI 경제정보센터(2007),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참조.

- 또한 교사자격증 취득이후에도 일정기간 경과 시 관련분야 이수 연수 시간 지정 등 교사들의 경제학적 기본 소양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실은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의 경제 담당 교사의 경우, 대학에서 1-2과목의 경제학을 듣고도 경제 수업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우리 경우도 경제 담당 교사에 대해 경제과목 최소 5개 이상 수강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기존 교사들은 대학에 개설된 경제학 교육 과정을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수강케 함으로써 경제학 소양의 함양과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과 내용을 학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후 연구를 통해 체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전국 중학교 사회과 교사는 25,263명(수도권 11,705명, 지방 13,558명)임. 지방의 열악한 경제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의 사회과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음.

-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예컨대 5년에 1회씩 경제 분야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 과목별 교수학습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추진

- 2007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이 추진되었으나 17대 국회 파행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금년 정기 국회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재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춘 경제교육협의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범사회적 여건을 조성.
- 동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경제교육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학계, 민간 교육기관, 경제교육 담당 교사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순수 민간성격의 경제교육협의회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교육협의회를 통해 개별 기관이나 단체의 교재, 프로그램 등을 온 라인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하여 운영
 - 클리어링 하우스의 구축은 교육 수요자에게 자료의 적시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 공급자에게 수요자 중심의 교재 개발 및 자료 이용에 대한 피드 백 등과 같은 효율적인 쌍방향 의견 교환 채널을 갖출 수 있음.
- 경제적 사고와 지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해력 검정시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현재 경제교육협회와 KDI가 의뢰하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추진 체계, 방법, 예산 조달 등에 관한 기본전략 등이 도출될 예정임.
 - 미국과 일본에서도 경제이해력 시험이 실시되고 있음.

< 참고문헌 >

- 경제교육협의회,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KDI 경제정보센터, 2007.
-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해설(총론)』, 2000.
- 교육인적자원부, 『경제교육의 이해』, 2003.
- 금융감독원,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2006
-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2003
- 김진영,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제 교육』, 사회과 교사포럼 전국심포지엄, 2004.
- 류태하 · 김정섭, 『한국의 반 시장적 국민 정서의 원인 규명』, 2006.
- 박명호,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2005.
- 박상선,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한국 경제 교육의 방향’, 『지역 개발 연구』, 제 36 권 1호, 2004년 6월, pp. 23-39.
- 유정호,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3.
- 이지선, 『각국 경제교육의 내용 비교』, 『Click 경제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2006.12
- 전홍택 · 김진영,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 · 미 · 일 비교』, KDI 경제정보센터, KDI-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자료, 2006.
- 최병모 · 김정호 · 이미경,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체계 분석』, 학술진흥재단, 2005.
- 최병모 · 김정호 · 이미경, 『일본 교과서에서의 경제교육내용 분석』, 학술진흥재단, 2004.
- KDI, 『OECD/미국 재무부 공동주최 금융교육 국제회의』출장보고서, 2008.5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07.
- KDI 경제정보센터, 『초, 중, 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2006.
- Abbott, Ian, “Economic Education in England”, *Online Journal for Social Science*

Education, 2003.

Burnett, Kimberly and Sumner J. La Croix,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in Hawaii”, 2003.

Hansen W. Lee, “Principle-based Standard: on the Voluntary National Contents Standard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1989.

Kim, Chin-Young, “Comparative Study on Economic Education: Korean and Japanese Schools”, NIRA working paper, 2000.

NCEE, “Survey of the States”, 2005, 2007.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tandard for Social Studies”, 1992.

OECD,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2005.

US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06

Walstad, William B., "Economic Education in U.S. High Schools", 2005.

지정토론

김진영(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지정토론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대학 '경제학 입문' 교육의 문제와 과제

- 사회 : 김병주(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발표 :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론 :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대학 ‘경제학 입문’ 교육의 문제와 과제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I. 서론
- II.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 III.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 IV. 경제교육 수요, 어떻게 늘릴 수 있나?

I. 서론

비록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60년대에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¹⁷⁾,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본격적으로 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 일반대학에서 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경제 교육 방법론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한국경제학회가 창립된 지 거의 60년에 이르고 그동안 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경제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은 1987년에 1편, 2007년에 1편, 모두 2편뿐이다.¹⁸⁾ 이외에 ‘강의기법’이나 ‘강의방법’ 등으로 검색되는 논문은 한 편도 없다. 이는 우리 경제학계가 학생들에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경제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차원에서 관심영역에서 비껴왔거나 연구논문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리고 ‘한국경제교육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일반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숫자가 매우 제한적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7)미국의 경제학회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60년대에 시작했음을 G. L. Bach and Phillip Saunders, "Economic Educatio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5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경제학회의 ‘경제교육분과위원회’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제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서 각 학교에 추천하는 교과서를 발표한 보고서를 1963년에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Economics in School”을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논문 참고.

18)이재웅, “한국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36집제1호, 1987, 김영용, “‘경제학 소설’의 경제교육적 가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2000년대 초에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거의 매년 한 차례 경제교육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회의를 갖는 등 경제교육에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¹⁹⁾

본 논문은 경제교육의 문제와 과제를 ‘경제학 입문’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 한다. 먼저 경제학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고찰한 다음, 경제학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입문 교육 문제와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II.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1. 강의와 연구의 트레이드 오프

대학에서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이다. 비록 실증적 통계자료는 없지만, 경제학계 현황을 개관하건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에 더욱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수들이 ‘교육’ 보다는 ‘연구’에 보다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제약을 받는 대학교수들은 연구와 강의에 제한된 시간을 할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와 강의는 트레이드 어프 관계이다. 그런데 교수가 강의와 연구 부문에 투입하는 시간은 역시 대학당국의 교수업적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본다.

(1) 교수업적 평가제도

비록 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고는 하지만, 교수의 기본 역할은 뭐니 뭐니해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 즉 교육이다. 교수의 역할 가운데 사실 연구도 잘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 100대 대학’ 등 대학교 순위를 정할 때,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는 판단 지표이다 보니, 강의중심 대학이건 연구중심 대학이건 모든 대학들이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19)경제학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경제교육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회의는 ‘한국경제학교육 이대로 좋은가?’(2000.6), ‘경제학, 이렇게 가르치자’(2000.9), ‘한국경제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2001.2), ‘경제학 교육에 있어서의 기업’(2001.9), ‘경제학 교육과 경제정책’(2002.9), ‘새로운 경제교육의 방향 모색’(2004.11),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1),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2006.9) 등 이다.

비록 교수의 업적 평가는 강의, 연구, 사회봉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실적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3가지 항목 가운데 연구 실적의 비중이 커 질수록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에 치중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각 대학에서 승급과 승진 심사에서 교수업적을 평가할 때 연구 실적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강의업적은 최소한의 책임강의 시간 수를 충족시켰는지 여부만 파악할 뿐, 강의에 대한 평가 정도가 감안되지 않는다.²⁰⁾ 매스컴에서도 연구 실적이 없거나 부족해서 승급이나 승진심사에서 누락되었다는 뉴스는 자주 등장해도, 강의가 형편이 없어서 승급이나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뉴스는 접하기 어렵다.

특히 대학당국이 교수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최근 교수의 책임강의 시간을 많은 대학에서 주당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25% 감축하거나, 또는 9시간에서 6시간으로 30% 감축하였다. 기존의 교수들이 3과목씩 가르치던 것을 2과목만 가르치게 되면 신입교원수가 거의 50%이상 증원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학의 예산제약으로 단기간에 교수 충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설강 과목수를 줄이거나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율이 대폭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더구나 책임강의 시간 수가 줄어들 때, 전임교수들은 학생 수도 많아 강의평가 점수도 얻기 어려운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대학원 과목이나 학부의 전공과목 강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원론’과 같은 학부의 입문 과목들은 시간강사의 몫으로 돌아가기가 쉽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원론 강의의 질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²¹⁾ 외국 대학에서도 ‘경제학 원론’ 강의를 주로 강의조교(TA)들에게 맡기고 있는 이른바 ‘연구중심 대학’들의 학부 경제교육이 한계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²²⁾ 최근 교수의 책임강의 시간 축

20) 필자가 속한 대학의 경우 강의업적 평가에는 승급심사대상자는 해당직급 재직기간동안 주당 책임강의시수(주당 학부책임강의시수 포함)를 모두 충족했지만 여부만 파악한다. 그렇지만 연구업적에는 주요 비교대학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을 기초로 한 연구필수요건과 비교해서 교수별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21) 물론 모든 시간강사의 강의품질이 전임교수보다 낮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각박한 강사료가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 여러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강의해야 하는 시간강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면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2) 미국에서 TEU(Test of Economic Understanding)를 가지고 대학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강의를 중시하는 50개 인문대학에서 경제학원론을 수강한 2학년들의 점수는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TEU 점수가 6점 높았다. 그런데 명문('high prestige')대학 2학년생들은 1.6점 높았으며, 강의조교(TA)가 주로 경제원론을 강의하는 40개 연구중심 대학생들은 0.8점이 높았을 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nry H. Villard, "The Evalua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Where We Now Stand," *Journal of Economics*, Fall 1969, p. 60 참고.

소조치로 이 문제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서 강의능력이 중시되지 않는 것은 신규채용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대개 각 대학에서는 임용 대상 후보 교수로부터 강의경험이 있는 교과목 이름과 연구실적 리스트를 포함한 이력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채용심사 시에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교수들 앞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그렇지만 강의 경력이 있는 임용 대상 후보 교수의 강의 평가 자료(예컨대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 등)를 요청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구논문 발표능력을 통해 강의 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논문발표와 강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30분 이내의 연구 논문 발표를 보고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강의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임용후보자의 과거 강의에 대한 평가 자료를 요구해서 심사하며,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의미있는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중심대학이든 강의중심대학이든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임용 기본조건으로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SCI 등재논문 편수 등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심사를 하고 있다. 이는 강의중심대학에서 매우 유용한 현장 실무경험이나 실용지식을 갖춘 인재를 정규직 교수로 채용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강의중심대학’의 임용심사에는 연구 능력보다는 교수의 강의 실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들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면 학교로부터 특별 보상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강의평가 점수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 보상하는 사례는 드물다. 비록 대학에 따라서 매년 또는 매학기 ‘Best Teacher’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는 해도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강의를 잘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²³⁾ 그러므로 강의 평가에서 평균수준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모든 교수들에게 학교당국이 우수 연구논문에 대한 포상과 유사한 장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우수한 명문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종신고용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승진을 못하는 사례도 있다. Becker and Watts는 미국 대학에서 강의실력이 연봉조정이나 승진 결정에 약 25% 내지 30%의 비중을 차

23)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도 1년에 한 차례 개교 기념일에 전체 대학교에서 계열별(이공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등)로 1명씩 선정하여 포상한다.

지하고 있으며²⁴⁾, 1995년과 2000년도 미국 경제학과 교수 서베이에 의하면, 2000년도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은 1995년에 비해 약 30% 포인트 감소하였고, 대신 강의에 투입하는 시간은 같은 기간에 약 2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투자의 변동은 경제학과에서 승진이나 연봉조정에 강의평가 비중이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한다.²⁵⁾ 이는 교수로 하여금 강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의 조정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2) 이중 업적평가제도의 도입

학교 당국이 연구에 치중하려는 경제학 교수들로 하여금 강의를 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강의의 품질이 나쁘면 당장 승진이나 연봉조정에 불이익을 준다고 위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장려할 방법은 아니다. 그것 보다는 교수들이 강의에 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강의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학교당국이 교수 업적 평가시에 연구와 강의에 주어졌던 비중을 조정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교수들이 임용 이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업적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구생산성이 떨어진 교수들은 연구업적을 채우기에 전전공공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연구실적을 독려하기 보다는 강의기법을 개발해서 강의의 품질을 높이게 하는 것이 학교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강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임용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연구중심교수 또는 강의중심교수로 구분해서 업적을 평가하는 이중(two-track)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연구중심교수에게는 강의부담을 예컨대 현행 1년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12시간에서 9시간 또는 6시간으로 대폭 줄여주면서 정평있는 우수한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의무를 지우고, 강의중심교수에게는 주당 강의책임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18시간 또는 21시간 등으로 대폭 증대시키는 한편 연구논문 실적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물론 강의중심교수들에게도 강의 품질을 높이도록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달할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24) William E. Becker and Michael Watts, "Teaching methods in U.S.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p. 269.

25) 상계서, p. 272.

(3) 교과과정

교과과정도 역시 연구와 강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므로 연구 중심 대학의 교과과정과 강의 중심 대학의 교과과정은 분명히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의 교과과정을 일별해 보니, 연구 중심 대학과 강의 중심 대학 사이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학 특성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경제학 전공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지만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므로 과목의 종류나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도 대학원 학습에 필요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데 보다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강의 중심 대학에서는 졸업 후 기업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출할 것이므로 기업에서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는데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²⁶⁾ 예를 들면 강의중심 대학에서는 ‘관리경제학’처럼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제학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필수교양과목으로 ‘무역의 이론과 실무’, ‘기업정보의 이해’, ‘세계경제의 이해’, ‘중국 경제의 이해’ 등 기업 활동에 보다 유용할 과목들을 폭 넓게 설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임용교수의 최저 요구학위나 연구역량 중심의 채용제도에 신축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제교육 방법

(1) 현실경제 사례 연계 강의

이미 오래 전에 미국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의 수업방법에 비판론이 제기된바 있다. 대다수 교수들이 아직도 “칠판과 백묵(chalk and talk)”만 가지고 수업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학과의 목표가 교육(teaching)도 포함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영대학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경제의 기업 사례분석(case-study)과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는 직접 연관 짓기 어려운 가상의 예를 들어 이론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현실경제에서 별 의미도 없는 점탄력성이나 호탄력성의 설명이나 계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²⁷⁾ 비록 우리나라

26) 필자가 속한 학교의 경제금융학부 2007년도 취업자 83명 가운데 96%가 제조기업과 금융기업에 취업하였다.

27) Robert E. Lucas, Jr., Alan B. Krueger, Rebecca M. Blank, "Promoting economic literacy: Panel discus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Nashville: May 2002, p. 473.

라 일반대학 경제학과 모든 교수들의 교수방법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위와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00단위나 400단위 고학년 전공과목에서는 이론에 치중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100단위 기초과목인 경제학 원론, 입문, 또는 개론과목에서는 현실경제와 이론의 접목이 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실 경제 응용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배운 이론의 유용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경제원리를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이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학이 어렵기만 하고 매마른(dry) 내용이라는 기존의 편견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경제원론 교과서에 차츰 보다 많은 현실경제사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경제와 경제학 입문 수업을 연계시켜 강의하는 교수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질의응답 및 토론식 강의 방식²⁸⁾

우리 신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져 있다.²⁹⁾ 지금 대학생들은 디지털시대에 태어나 자라 쌍방향(two-way)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natives)’ 세대인데 비해 현재 대학교수들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일방통행(one-way)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이른바 성인이 되어 디지털 세계에 이주해온 ‘디지털 이민’ 세대이다.³⁰⁾

비록 교수들에게는 일방통행식 강의방법이 편리하고 편안할 수도 있겠지

28)이 부분은 손정식, “디지털 이주민 1.5세대를 위한 강의,” 교수신문(2007. 4.7)을 발췌한 것이다.

29)미국의 NCB 대학교 프렌스키(Marc Prensky) 교수는 20세기가 끝나기 1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 구분한다. 디지털 원주민들은 갓 난 아기 때부터 디지털 장난감, 비디오게임, 디지털음향기기, 디지털 휴대전화, 컴퓨터 등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비디오게임, 컴퓨터게임, 디지털카메라, 이메일, 인터넷 서핑, 여러 기능의 휴대전화, 메신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이 생활화 된 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자란 ‘원주민(natives)’들이어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정보처리방식도 그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며, 글을 읽고 그림을 보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그림을 먼저 보고 글을 읽는다. 이들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하이퍼텍스트처럼 무작위로 접근하고 수용한다. 이들은 즉석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칭찬 받기를 원한다.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NCB University Press, Vol.9 No. 5, October 2001* 참고.

30)교수들은 디지털세계가 좋아서(또는 불가피해서) 디지털 언어(신기술)들을 익힌 야날로그 세대이다 보니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아무래도 야날로그 역량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 이메일을 복사해서 읽는대신, 이메일을 열어보았느냐고 전화한다든가, 글 쓸 때도 종이에 먼저 쓴 다음에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고, 원고를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에서 직접 수정하기보다는 인쇄해서 작업하는 것이 편안하다.

만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강의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강의 시간 내내 독백하듯 교수가 혼자서 열강하고, 학생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경청하고 받아 적기만 했던 전통적 강의방식보다는 강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강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이다. 더욱이 ‘경제원론’ 수업이 흥미도 재미도 없다는 평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바로 흥미와 재미를 더하는 방법의 하나는 강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질의응답과 토론식 강의방식은 강의실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체로 경제원론과 같은 기초과목은 한 반에 수강생 숫자가 100명, 150명 내외에 이르므로 이러한 대단위 강의실에서 효과적으로 질의응답이나 토론식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사이버강의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미 교수 개인별로 담당하는 모든 과목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이메일도 개별학생과 개별적으로 주고받고, 필요하면 전체 수강생에게 일괄적으로 동보 메일도 보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필자의 과목별 홈페이지는 교수게시판, 질의응답방, 토론방, 자료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강의실 환경을 학교가 마련한 것은 앞으로 디지털 원주민인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디지털 이민 세대 교수들도 모두들 강의에 디지털 언어를 구사하기를 대학당국이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24시간 생활주기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과목별 홈페이지(사이버 강의실)의 교수게시판에 강의내용 관련 토론주제를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24시간 언제라도 들러서 토론방에 자기 의견을 올리고 다른 학우의 글에 반론이나 지지의견을 올리도록 하면 효과적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재의 한 장 강의를 끝나면 교재의 책 뒤에 있는 연습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는 야날로그 방식과는 크게 다른 방식이다.

물론 이 모두가 디지털 이민 세대 교수들에게는 힘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디지털 이민 세대 교수들이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할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교수들이 직접 제작할 능력을 갖추도록 대학당국이 파워포인트 작성 기법에 대한 연수기회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준별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수업방법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을 장려하고 교수업적 평가에 가점이 주어지는 등 동기부여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예컨대 토론식 수업방법은 시도하는 교수에게도 엑스트라 부담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토론에 대한 거부감으로 학생들조차도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강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하는 교수들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비전통적 수업방식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이 차지하는 부문이 많고 현실경제 응용사례를 찾기도 어렵고 직접 적용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많은 고단위 과목에서는 토론식,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과목에서도 한 학기 또는 한 시간 내내 질의응답과 토론방식으로 이끌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비전통적 수업방식’은 전통적 ‘칠판과 백묵’에 의한 수업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질의응답과 토론방식을 가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적 수업방식에 얼마나 큰 비중을 줄 것인가는 개별 교수마다, 그리고 과목과 수강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경제학’ 입문 과목에서는 교육 방법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경계하거나 무시할 것은 아니다. 사실 경제문제는 대부분 논쟁적인 것이 많고 찬반양론이 가능한 것이어서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타 학문에 비해서 오히려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개인의 경험과 연계하는 강의

학생들이 경제학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강의실에서 배운 개념이나 이론들을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적 유희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매일의 경제활동 내역을 일기로 써보게 하는 과제를 제시한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³¹⁾ 즉 1주일간 자기가 실제 경험한 사례를 하루 한 가지씩 한 문단 정도의 일기를 쓰게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를 강의실에서 배운 개념이나 이론과 연관 지어 쓰게 한다.³²⁾

31)Stephanie M Brewer, James J Jozefowicz, “Making Economic Principles Personal: Student Journals and Reflection Paper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2006, p. 202.

32)상계서. 학생들의 일기 사례를 하나 인용해 보면, “(November 19, 1999) Today I had to go to

필자도 과거에 졸업생들로부터 대학 재학할 때 학습한 경제학 수업은 졸업 후에 현실경제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자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매일 매일 학생들이 접하는 일상생활이나 FTA처럼 현실경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에 적용시켜 분석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를 한다. 그 결과 수강생들은 배운 이론이 얼마나 현실경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또 사례분석 과정에서 이론을 배우는 의의와 흥미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특히 학생들이 ‘경제원론’ 등 입문 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개념을 자기 자신과 직접 연계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학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거시경제 개념들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즉 자신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필자는 GDP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GNI, 일인당소득, 경제성장률 등등)을 강의한 다음 학생들에게 GDP 관련 다양한 개념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과제를 부여한다.³³⁾ 외부효과를 강의하면서 외부비용(external cost), 외부혜택(external benefit)의 개념을 설명하고, 교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외부비용이나 외부혜택 사례를 찾아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우는 경제개념들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경제 개념의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배우는 재미를 얻는다.³⁴⁾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의함에 따른(예: 현실경제 사례분석) 또 하나의 문제는 교수가 강의실에서 커버하는 양이 적어지는 것이다.³⁵⁾ 그렇지만 어떤

the store for a package of few socks. I was expecting them to cost around \$8.00, but they only cost \$5.08. This is a consumer surplus, because I was willing to pay \$8.00, but I only had to pay \$5.08.”

33) 학생들이 제시한 답에는 “200년도 우리나라 명목GNI가 902조원이라 하니,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대체로 우리나라 명목GNI가 9조 2천억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1,500만 원 연봉을 주는 일자리가 60만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내가 졸업하는 해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내가 취직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은 나의 미래와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34) 이러한 과제는 과목별로 만들어져있는 사이버강의실에 있는 과목별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 동안 캠퍼스에서 경험한 외부비용, 외부혜택 사례를 찾아서 왜 그것이 외부비용인지 또는 외부혜택인지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게 한다. 외부비용이나 외부혜택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사례를 올리는 경우 다른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5) William E. Becker and Michael Watts, eds.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Alternatives to Chalk and Talk*. Cheltenham, U. K.: Edward Elgar, 1999.

식으로 경제학 입문 강의를 하든 커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므로,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특히 경제원론과 같은 입문 과목 강의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문 과목의 강의에는 커버하는 범위에 중점이 주어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III.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1.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교육의 의의

경제학과에서 개설하는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1)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2)경제학을 부전공, 다중전공,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얻기 위해 수강하는 학생, (3) 비전공생으로 재학중 ‘경제학 원론’ 한 과목만을 교양과목으로 학습하려는 학생 등이 있다. 그런데 경제학과에서는 대체로 위에서 첫째와 둘째 목적의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경제교육을 학습하는 대상에는 경제학 전공생들 이외에 교양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 전공생들 숫자보다 수십 배나 많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한 결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록 경제학과 교수들이 대다수 학부과정에서 전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경제의 기본 개념과 기초적인 경제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내용과 방법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는 되돌아볼 여지가 있다. 필자도 행정을 담당했을 때, 타 단과대학에서 경제학 입문 과목을 교양필수로 개설할 것을 요청하면 거절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타 단과대학 학장이나 학과(부)장들에게 ‘경제학 입문’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강좌개설을 설득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리로 비전공생들이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찾아오면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수용할 뿐, 비전공생들을 위해 별도의 반을 만들어 주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경제학과의 ‘경제학 입문’ 교육이 대체로 전공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러다보니 경제학과에서 개설되는 ‘경제학 입문’ 과목 내용은 대부분 상급학년의 중급미시경제학이나 중급거시경제학을 학습하는데 필요

한 기초지식을 전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비전공 학생들을 대부분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므로 경제학과에 설강한 경제학 입문 과목은 마지막(terminal)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려는 비전공생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전공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성과는 이들에게 경제나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을 갖게 했는지,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키우는데 성공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원론’ 수업에서 비전공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왜 최근 젊은이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지,” “왜 평준화 이후 조기유학생들이 늘어났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인지,” “왜 뉴질랜드에서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철폐한 이후 일정 기간 이후에 농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승했는지³⁶⁾ 등등, 다행이도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원론’ 시간에도 다룰 수 있는 흥미진진한 주제는 너무 많다. 우리는 비전공학생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경제학 원론’ 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전공생들을 위한 입문 과목에서는 교재의 너무 많은 양을 커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20 여 년 전에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성균관대학교 이재웅 교수도 “잡다한 경제용어, 개념, 원리 등을 무차별하게 평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논리적 이해보다는 주입식 용어 암기 등에 그치며 경제적인 사고 방식을 학생에게 훈련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³⁷⁾

미국에서도 경제학 입문 강의에서 너무 많은 양이 커버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한 중요한 기본개념(key concepts)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물론 기본 개념과 이론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교수들이 판단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³⁸⁾

36)김정호, “뉴질랜드 농민이 전하는 말,” 한국경제신문 (2008.6.9)

37)이재웅, “한국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36집 제1호, 1987, p. 19.

38)Carol Johnston, Ian McDonald and Ross Williams, “The scholarship of teaching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p. 195.

2.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학 입문 설강과 수강 현황

서울 주요 대학의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원론’을 비롯한 입문 과목의 개설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원론’ 과목을 개설하고 오픈 수강제를 통해 비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할 경우 수강생의 대부분은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고 한 반에 겨우 몇 명, 십 여 명의 비전공생들이 수강 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 입문 과목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강되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생이나 비전공생 모두 비슷한 경제학 기초지식을 가진 집단이므로 실제로 비전공생들이 전공생에 비해 성적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생들의 수강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학 입문 과목들이 대부분 상대평가대상 과목이므로 비전공생은 전공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형은 법학대학이나 경영대학 등 특정 단과대학에 필수과목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이 설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때 해당 대학 학생들은 자기와 동질적인 집단과 경쟁한다. 또한 비전공 학생들도 경제학 전공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학점 경쟁에 따른 심리적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셋째 유형은 대학 전체 교양과목의 하나로 ‘경제학 원론’과 같은 입문과목을 설강하고, 비전공생들에게만 오픈하는 방식이다. 비전공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일 것이다. 학점경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기 때문이다.

넷째 유형은 다른 전공과 경제를 연계한 과목을 설강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우 인류학과에는 ‘문화와 경제’, 지리학과에는 ‘경제지리학’ 등의 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이 경우 학제간 강의를 담당할 교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많은 비전공생들로 하여금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셋째 유형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아래 <표 1>에서 필자가 속한 대학의 2007년도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의 수강현황을 보면, 대학 전체의 교양과목의 하나로 비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설강된 경제학과 입문 과목은 경제학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설강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목에 비해 타과(비전공생)생들의 수강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경제학 입문 교양과목 수강현황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현실경제의 이해(1/2학기)	환경문제의 경제적 이해	시장경제의 이해
이공	37	33	88/108	31	55
경영	40	37	44/55	23	45
인문사회	47	22	73/58	19	16
예체능	2	1	10/0	10	2
경제*)	8	12	9/16	28	15
합계	134	105	224/237	111	133

*)원칙적으로 경제학과 재학생들은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현실경제의 이해’와 같은 타 단과대학이나 대학교양 과목으로 설강한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환경문제의 경제적 이해’나 ‘시장경제의 이해’ 과목은 경제학과 재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

경영대학과 법학대학 설강한 ‘경제원론’ 과목은 해당 대학 학생들이 몇 개 기초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2>는 경영대학과 법학대학에 설강한 경제원론 과목의 수강현황이다. 이 경우에는 설강대학 학생들을 제외한 여타 비전공학생들의 수강 숫자는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타 단과대학 개설 ‘경제원론’ 수강현황

	경영대	법대
경영	321	11
법	0	282
인문사회	22	39
이공	13	0
합계	356	332

위의 통계 결과를 모든 대학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비전공생들에게 경제학 입문 과목의 수강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양과목으로 ‘경제원론’을 여러 개 반 설강할 때, 고려대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원론(인문계)’ ‘경제원론(자연계)’ ‘경제학개론(인문계)’ ‘경제학개론(자연계)’ 등 이과와 문과 전공으로 다시 구분해서 설강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는 비슷한 학문적 취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수강한다는 면에서 교수가 강의하기에도 훨씬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실경제 사례를 예로 들 경우 인문계와 자연계 각 반에 해당 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례분석 효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도 동질적인 집단이 동일한 반에서 학습함으로써 학점경쟁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적을 것이다.

보다 눈에 띄이는 것은 <표 3>에서 보듯 외부기관의 후원 하에 설강된 경제관련 과목에 다양한 비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기업원에서는 매 학기 10여개 대학에 ‘시장경제의 이해’ 과목을 설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 100명에서 15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조망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갖는다. 실제로 이러한 과목을 진행해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과목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매 주 1회씩 외부교수나 CEO들이 출강하여 다양한 연사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 출강하는 교수들은 타 대학교에서 이미 강의능력이 인증된바 있는 교수나 CEO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흥미있고 유익하다는 정평이 캠퍼스에 나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강사의 강의 실력이 비전공학생들로 하여금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할 동기를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경제학 입문 과목에 보다 많은 비전공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입문 과목의 설강뿐만 아니라, 명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외부지원으로 설강한 경제학 입문 과목 수강현황

	이공	경영	인문사회	예체능	경제	합계
시장경제의 이해	55	45	16	2	15	133

※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설강한 과목

3. 비전공생도 관심가질 경제학과 전공과목

경제학과 개설과목 가운데는 비록 경제학 전공생들을 위해 설강된 고단위(300단위 400단위) 과목이지만, 비전공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과목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과에서 대부분 설강하고 있는 환율과 선물거래를 강의하는 국제금융, 한국경제의 이해, 세계경제의 이해 등의 과목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기업에 진출할 전공생뿐만 아니라 비전공생들에게도 유용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런데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 경제학과 4학년에 설강한 과목이기는 하지만, 여타 비전공생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과목인 ‘세계경제의 이해’ 등은 총45명 수강생 가운데 경제학과 전공생이 39명으로 87%를 차지하고, 비전공생들은 6명으로 13%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관리경제학’도 경제학전공생 73명 비전공생 5명으로 경제학 전공생들만 수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과 전공과목에 비전공생들의 수강이 매우 저조한 까닭은 아무래도 해당 교과목의 내용이나 강의방식에 대해 비전공생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당 교과목의 설명을 보면 불과 몇 줄로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공생들이 수강해서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학과에서 비전공생들이 선호할만한 교과목을 소개할 때 비전공생들도 아울러 염두에 두고 교과목 소개를 작성하고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과목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비전공생들의 경제학 관련 과목의 수강이 부진한 것은 미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의 약 40%가 학부과정에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한다고 한다.³⁹⁾ 필자가 속해있는 대학에서 봄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비경제학전공생 숫자는 1학년부터 4학년생까지 모두 합쳐 15,000 여명이다. 그런데 봄학기에 경제관련 입문 과목을 수강한 비전공 학생은 887명으로 약 5%이다. 만약 4년 동안 그러한 숫자가 입문 과목을 수강신청할 것으로 보면 887명의 4배 정도 비전공 학생들이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약 3천5백 명이 된다. 그러므로 많아야 약 25% 학생들이 경제학 입문 과목을 재학 중에 수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4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숫자이다.

39) Robert E Lucas Jr, Alan B Krueger, Rebecca M Blank.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002, p. 473.

결론적으로 외국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Principles of Economics for Non-majors” “International Economics for Non-majors” 등의 과목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을 별도로 설강할 필요가 있다. 또는 비록 동일한 ‘경제학 원론’ 과목을 설강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반(section)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경제학원론의 기본 이론만을 이용해서 현실경제 사례분석 위주로 강의하는 “현실경제의 이해”는 경제학 전공생들의 수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비전공 학생들만 수강하게 하고 있는데, 앞의 <표 1>에서 보았듯 매 학기 150명의 정원을 100% 채우고 있다. 특히 비전공생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제학의 기초 원리와 이를 현실경제에 접목해서 현실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니 학생들의 흥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경제학 원리를 배우는 데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경제학과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고 싶다면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입문 과목 강의에서 흥미를 느끼게 하면 더 많은 경제학과 전공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학과 교수배정 기준

경제학과 교수들이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교육에 열을 올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학당국의 각 학과별 교수채용 할당 배정 기준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대학당국이 과별 교수채용 정원을 배정할 때 결정적 요소는 학과별 학생 정원이다. 그래서 대체로 정원이 많은 학과에는 보다 많은 신입교수 채용인원을 할당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과 학생정원은 많지 않은 편이어서 경제학과 교수 숫자도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입문 강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학과 교수들의 강의부담은 늘어나게 되니 이를 환영할 교수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당국이 신입교수 채용 할당 할 때, 개별 학과별 학생정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전공생들이 예컨대 경제학과 과목을 수강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많은 수의 비전공생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과목이 많은 경제학과의 신입교수 채용할당에는 이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대학 등 전체 대학의 수학교육을 담당하는 수학과 교수 정원을 수학과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 되는 것과 같다.

IV. 결론

대학의 경제학 교육과 관련해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강의중심대학에서 조차 강의보다는 연구는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학 입문 과목에서는 이론 강의에 치우친 전통적인 강의방식을 탈피하고, 현실경제와 연계한 강의방식이 효과적일 것임을 제안 한다. 아울러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칠관과 백묵’에 의한 전통적 강의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수세대와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다른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식 및 토론식 강의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이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다 많은 비전공생들이 경제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별도의 경제학 입문 반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과 교수들은 비전공생들을 위한 입문과목 강의 목표는 경제문맹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NGO를 비롯해서 경제학 비전공자들이 각계 각층에서 경제정책의 입안, 시행, 추진, 비판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권자로서 비전공자들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대선이나 총선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공생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학습시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경제학 교수들은 경제정책이 잘못 입안되었다거나 유권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불평할 자격을 잃게 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시간제약과 예산제약 때문에 주로 필자의 관찰과 경험, 그리고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필자의 여러 주장들은 실증적 근거를 찾는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후학들이 이를 차후 연구과제로 삼아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들은 문제 제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 참고문헌 >

- 김영용, “경제학 소설’의 경제교육적 가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 이재웅, “한국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36집 제1호, 1987.
- Bach, G. L. and Phillip Saunders, "Economic Educatio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5.
- Becker, William E. and Michael Watts, eds.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Alternatives to Chalk and Talk*. Cheltenham, U. K.: Edward Elgar, 1999.
- Becker, William E. and Michael Watts, "Teaching methods in U.S.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 Brewer, Stephanie M. and James J Jozefowicz, "Making Economic Principles Personal: Student Journals and Reflection Paper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2006.
- Johnston, Carol, Ian McDonald and Ross Williams, "The scholarship of teaching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 Lucas, Robert E. Jr., Alan B. Krueger, Rebecca M. Blank, "Promoting economic literacy: Panel discus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002.
- Prensky, Marc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NCB University** Press, October 2001.
- Villard, Henry H., "The Evalua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Where We Now Stand," *Journal of Economics*, Fall 1969.

< 부록 >

경제학 교양과목에 대한 비전공생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필자가 진행하는 ‘매경-한양금융특강’ 강의를 수강하는 150여명의 학생과 캠퍼스에서 무작위로 만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총응답자는 235명이다. 1만5천명이나 되는 대학생 가운데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특히 특정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다는 점 때문에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부록>에라도 첨가하는 이유는 비록 통계숫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겠지만,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관련 문제 제기나 시사점을 얻을 단초를 찾는 데 조금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다.

장래 경제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없다’는 학생이 42.1%였고, 1과목 수강 의향을 밝힌 학생은 30.6%, 2과목 이상을 수강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27.3%이었다. 그래서 수강의향을 밝힌 학생 57.9%이 의향이 ‘없다’는 학생보다 약 15% 포인트 많았다. 이는 상당히 많은 비전공생들의 경제관련 과목에 대한 니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련 과목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수강동기를 문의한 결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9.0%,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가 26.1%, ‘부전공, 다중전공, 복수전공 과목으로 수강한다’는 학생이 13.0%,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1% 순이었다. 이를 통해 비전공생들이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주요 동기는 취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함양과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전공생들을 위해 설강하는 경제관련 과목이 제공해야 할 지식은 교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한 이후 소감에 대한 질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가 44.9%, 교양을 넓혔다가 28.3%,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가 18.8%였다.

아울러 경제관련 과목 수강에 대한 만족도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만족’ (대단히 만족 17.4%, 대체로 만족 70.4%)이었고, ‘불만족’이 12.3% (대체로 불만족 9.4%, 아주불만족 2.9%)였다.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한 학

생보다 거의 7배 많은 것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경-한양금융특강’ 수강자들인데, 이들이 ‘매경-한양금융특강’ 강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강에 만족한 이유는 ‘교양과 호기심을 높였기’ 때문이 34.4%로 가장 높고, ‘흥미로웠기’ 때문 27.1%,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 26.2%였다. 이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관련 과목 내용은 교양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그리고 흥미있는 강의방법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강의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29.9%, 전공생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게 22.7%, ‘흥미로울 것 같지 않아서’가 13.3% 등 이었다. 이는 비전공생들에게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과목 내용을 쉽게 강의할 필요와, 내용도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꾸며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경제관련 과목에서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반을 개설할 경우 수강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9.2%, 없다는 응답이 20.0%였다. 그러므로 비전공생들을 위한 별도의 반을 개설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관련 과목 가운데 설강의 희망하는 과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희망하는 과목은 ‘세계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의 이해’, ‘중국경제의 이해’ 등 지역경제의 이해를 위한 과목이 20.0%로 가장 많았고, ‘경제원론’ 30.6%, 개인금융 36.2%, 국제금융 6.4% 이었다. 이를 통해 비전공생들만을 위해 개설해야 할 과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희망과목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지명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매경-한양금융특강’이라는 강좌를 수강해 본 경험을 통해 비전공생들에게 ‘개인금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학과에서 ‘개인금융’을 한 학기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는 학교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속해있는 학교에서 ‘매경-한양금융특강’ 또는 ‘시장경제의 이해’와 같은 옴니버스형 강의에서 개인금융 관련 몇 개의 주제가 몇 시간에 걸쳐 다뤄지고 있는 형태가 고작이지만, 몇 시간의 특강 형태라도 비전공생들에게 ‘개인금융’을 강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개인금융’ 과목의 개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문맹’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신용불량자 400만 가운데 거의 절반이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까닭이 비록 카드사의 카드 남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이 개인금융 가운데 ‘신용관리’와 ‘부채관리’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결과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퇴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러한 니드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화폐금융’ 과목에서 금융시장, 금융상품, 금융방식, 이자율, 신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통화이론과 통화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과목 내용이 비전공생들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

지정토론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